



진실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하고 4월 4~5일 1박 2일을 꼬박 걸어 안산 분향소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 청년 수천 명이 합세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적인 위로를 받아도 애통함이 가지지 않을 유가족들이 오히려 희생자 영정을 들고 정부에 대한 항의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마저 침몰시키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지난해 말에 통과됐는데도 3월초에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그 사이에는 행여라도 특별조사위원회가 메스를 들이댈까 봐 미리 힘을 빼놓으려고, 업무를 시작도 못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이라는 등 압박해 왔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3월 27일 기습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해양수산부 관료가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가족, 국회,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조사 대상’이 조사 기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외치며 행진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감사원, 검찰 등이 해 놓은 조사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참사의 실제적 진실 밝히기를 목표에서 배제한 셈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물론이고, 안전·구조 업무의 민영화 등 안전 규제 완화 책임 소재와 정경 유착 의혹,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보

고·지휘 시스템 문제, 국정원 실소유주설 같은 핵심 미해결 의혹들을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박근혜가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려는 시행령(안)은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관제 허수아비 기구이자 진실 은폐를 위한 들러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비록 여야 야합 탓에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관철하

진 못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5백만 명이 넘는 지지 덕분에 그나마 조사권이라도 갖고 구성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이 고시되면 (마치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노사정위원회처럼) 특별조사위원회에 기대할 게 전혀 없다.

게다가 정부는 시행령(안) 발표 직후에 정부가 내는 것도 아닌 민감보험·국민연금 액수까지 임의로 포함해 유가족 보상금 규모를 발표했다. ‘막대한 세금 지출’이라는 언론 플레이로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여론을 이간질해 몰타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보상금 논란으로 세월호 국면을 정리 수순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 이는 4·24 총파업과 4·29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1주기 국면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수작이기도 하다. 참으로 뻔뻔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매일 작업장에서 안전 위협을 당하는 노동자들

세월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의 운영 시스템에서 비롯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윤이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참혹하게 희생됐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늘리려고 안전 투자를 외면해 온 기업들과 기업 프랜들리를 외치며 안전 규제를 완화해 온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체

제의 현재 수장인 박근혜가 한사코 진실 규명을 방해해 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정부와 기업의 유착과 부패가 어떻게 노동계급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지 밝히고, 비극적 안전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노동자가 기계 부속품 취급을 당하는 작업장의 안전 위협 문제와 세월호 참사가 다르지 않다. 대중 교통, 병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은 해당 작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 즉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투쟁의 일부인 이유다.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세월호 진실규명을 포함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노동자가 함께 나서자. 4월 총파업이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자.

함께 참가합시다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따이기

4월 18일(토) 오후 3시 서울광장
오후 2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 (예정)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4월 16일(목)
- 서울(수도권 집중): 오후 7시 서울광장
- 울산: 오후 7시 울산대공원 동문
오후 6시 민주노총 울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행동'
4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해고 쉽게, 임금 낮게, 비정규직 많게

노사정위 야합 중단하라

노사정위가 3월 31일 합의시한을 넘기고도 야합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끌어 내, 4월 임시국회 등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관련 법·제도를 개악하려 한다. 박근혜가 연일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며 한국노총을 압박하는 이유다.

최근 한국노총의 회의 불참은 노사정 합의가 순탄치 않음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결코 사태를 낙관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노총 집행부가 내놓은 양보안이 위험성을 잘 보여 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국노

총 집행부는 일단 임금 문제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예컨대, 정부의 통상 임금 공격의 신호탄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관련법 제정의 기준으로 제시했고, 고령자의 노동 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는 '노동시간 피크제'를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데까지 문을 열어 주려 해 내부 반발을 샀다고 한다.

청와대는 한국노총 집행부에게 일정한 임금 양보안을 받아놓고, 이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를 강력히 주문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이 옳게 비판했듯이, 노사정위는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들러리 기구일 뿐이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과 산하노조들)에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함께 싸우자고 촉구해야 한다. 이것은 불만이 큰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사정위 야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투쟁 태세도 갖춰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권이 도발한다면 시기를 앞당겨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사정위 야합이 이뤄지면 임시국회에서 이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통상임금 확대 않고 직무성과급제 도입하려는 사측

정몽구는 임금체계 개악안 철회하라

현대·기아차 사측은 3월 31일 약속시한이 지났는데도 통상임금 확대는커녕,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사측은 최근 통상임금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현대차에서는 '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겠다'는 통상임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법적 요건이 충분한 기아차에서는 '법과 상관없이' 수당 삭감, 연월차 축소,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과 연계해 총액임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사측은 8+8 시행 시 제기될 임금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통상임금-임금체계-8+8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이런 책략에 맞서, 카드를 섞지 말고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한편, 사측은 이 참에 임금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 체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악랄한 의도도 드러냈다. 사측이 2일 현대차에서 제시한 '신임금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신임금체계의 골자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임금의 구성을 '기

초급+직무급+부과급(직능급)+성과급'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등을 없애려고 1987년에 만든 임금체계를 분쇄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 한 결과, 임금 차별이 고착화되고 노동자 60퍼센트가 임금 삭감의 대상이 됐다.

인사고과

개인별 능력과 성과에 따른 부과급-성과급제는 인사고과의 부활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사측 관리자들에게 줄 서게 만들고, 고령자와 '저성과자'의 임금 삭감도 부를 것이다.

사측은 당장에 반발을 무마하려고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존"하고 일단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깎겠다고 했다. 8+9 시행 때 했던 신입사원 차별을 더 노골화하겠다는 것이다.

단결을 해치는 이런 갈라치기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저임금층이 생겨나

면 결국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도 하향 압력을 받는다. 미국 지엠에서도 이중임금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 대부분이 저임금에 내몰렸다.

이 같은 사측의 공격은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악 방향과 일치한다. 현대·기아차에서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이 관철된다면, 이는 다른 사업장들의 기준 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에 매달리지 말고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최근 기아차지부가 특근 거부 투쟁에 돌입한 것은 좋은 출발이다. 현장 쟁점과 4·24 파업을 결합시켜 집회 등 기층 조합원들의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대차지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서 더 나아가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3월 31일 총파업 총투표에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투표율은 보기 드물게 높았다. 이는 박근혜와 사측의 공격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의 표현이다. 이런 힘으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 4·24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해, 더 큰 투쟁의 디딤돌로 만들자.

8+8 도입을 둘러싼 논란 사측의 생산량 보존 압박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현대·기아차 사측이 8+8 시행을 앞두고, UPH-UP과 외주화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그런데 최근 이경훈 집행부는 추가 노동시간을 강요한 사측에 맞서, UPH-UP을 더 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시간을 8+8로 맞추되 노동강도를 더 높ی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경훈 집행부는 8+8 시행으로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생산량을 보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추가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 강화나 하는 물음에 직면해 후자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생산량 보존 압박에 발목이 잡히면, 노동조건 후퇴 공격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사측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전환 배치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

